

긴급현안
분석자료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 오바마 당선을 中心으로

2008. 11. 3.

<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

미국 대선 판도와 오바마 정책			
미국대선 판도	- 오바마(민주당)가 매케인(공화당)후보에 비해 압도적 우세		
경제 철학 및 정책	정책	오바마(민주당)	매케인(공화당)
	경제철학	- 정부개입주의	- 시장경제원칙
	통상정책	- 보호무역주의	- 자유시장주의
	재정정책	- 세계개편통한 고용창출	- 기업성장통한 고용창출
	외교정책	- 평화공존, 탈이념, 탈인종	- 일방주의 원칙
	에너지정책	- 재생에너지 증대 (에너지 독립)	- 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現위기대책	- 위기 진화를 위한 FRB와 재무부 방안에 동의 -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추구		

오바마 당선시 미국의 예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제위기 : 재무부와 FRB의 방안 지속 추진 - 재정정책 : 국내 소비 제고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 - 통상정책 : 보호무역주의로 FTA 재검토 - 에너지 : 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개발 - 외교정책 : 평화공존 기조로 이라크 주둔미군 조속한 철군
-------------------	---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기 : 미국과 국제공조 추진으로 경제 심리 안정 - 통상환경 : 통상 마찰 심화 우려, 환경 문제 해소 비용 증가 - 국제금융여건 :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국면 진입 예상 - 세계 정세 : 평화공존 무드 조성
--------------	--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불안 해소 :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금융불안 해소 -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 수출 경쟁력 증가로 수출 증대 - 한반도 정세 개선 : 북한과 평화적 대화 무드 형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통상관계 악화 : 한미FTA 재협상 난항, 자동차산업 등 재협상 타격 - 대미 수출 둔화 : 체질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로 대미 수출 둔화

대응방안	
FTA 비준 조기 추진	- 대미FTA 협상에 대비한 협상 우위권 선점
수출 증대 노력 강화	- 미국 경기 회복과 달러화 강세를 활용한 수출 증가 노력 배가
대미 통상 외교 강화	- 민주당과 오바마 계열의 정책 입안자들과 외교 네트워크 구축
녹색 성장 전략 추진	- 미국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국내 녹색 성장 추진
남북 관계 개선	-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한 선제적 남북 관계 개선 노력

I. 미국 대선 일정과 판도

1. 대선 과정과 일정

- (선거 과정) 미국의 대선은 건국 초기부터 4년마다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함
 - 정당별 대선후보 선출 과정(유권자들의 관심과 입장이 반영) → 전국 전당대회(대통령, 부통령 후보 지명과 선거공약 및 정책 방향 제시) → 총선거(전체 유권자들이 선거인단 선출) → 선거인단 투표(538명의 선거인단이 일반 유권자를 대표)의 4단계의 선거과정을 거침
- (선거 일정) 2008년의 선거 일정은 2008년 11월 4일 총선거와 12월 15일 선거인단투표만 남겨놓고 있음
 - 12월 15일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며, 2009년 1월 6일 공표 후 1월 20일 미국 44대 대통령 취임
 -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도 실시되어 대외 통상 정책 결정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회의 양당 대결 구조도 주목됨

< 미국 대선 주요 일정 >

	날짜	일정	장소
2008년	1월 3일 ~ 6월 7일	당원대회, 예비선거	
	8월 25일 ~ 28일	민주당 후보지명명전당대회	
	9월 1일 ~ 4일	공화당 후보지명 전당대회	
	9월18일	투표용지 인쇄	
	9월19일	미국 전역 조기투표 시작	
	9월26일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미시시피주 옥스퍼드 미시시피대
	10월2일	부통령후보 토론회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10월7일	대선후보 2차 토론회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
	10월14일	유권자 등록 마감	
	10월15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	뉴욕주 햄스테드 호프스트라대
	11월4일	대선, 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12월15일	선거인단 투표	
2009년	1월6일	대통령 당선자 공표	
	1월20일	차기 대통령 취임	

2. 대선 추이와 현재 판도

- (대선 정국 후반 오바마 상원의원 우세) 2008년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던 두 후보의 지지도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 요인으로 오바마 후보가 우세를 나타냄
- (대선 초반 혼조세) USA Today와 Gallup이 2008년 1월 중순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바마는 45포인트, 매케인은 50포인트를 기록함
 - 반면에 NBC와 WSJ의 2008년 1월 중순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42포인트를 기록함
- (대선 후반 오바마의 압도적 우세)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조사기관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오바마가 압도적 지지를 받음
 - 오바마 후보는 매케인을 후보를 크게는 15포인트 작게는 3 포인트 격차를 유지하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 미국 대선후보 지지도 최근 현황 >

기관	조사날짜	표본	오바마(민주당)	매케인(공화당)	격차
RCP Average	10/22 - 10/28	-	49.9	43.9	오바마 +6
Rasmussen Reports	10/26 - 10/28	3000 LV	50.0	47.0	오바마 +3
Gallup (Traditional)	10/26 - 10/28	2435 LV	49.0	46.0	오바마 +3
Gallup (Expanded)	10/26 - 10/28	2409 LV	51.0	44.0	오바마 +7
Diageo/Hotline	10/26 - 10/28	870 LV	49.0	42.0	오바마 +7
Reuters/C-SPAN/Zogby	10/26 - 10/28	1179 LV	49.0	44.0	오바마 +5
ABC News/Wash Post	10/25 - 10/28	1316 LV	52.0	44.0	오바마 +8
IBD/TIPP	10/24 - 10/28	894 LV	47.0	44.0	오바마 +3
GWU/Battleground	10/22 - 10/28	1000 LV	49.0	46.0	오바마 +3
Ipsos/McClatchy	10/23 - 10/27	831 LV	50.0	45.0	오바마 +5
Pew Research	10/23 - 10/26	1198 LV	53.0	38.0	오바마+15

자료 : Real Clear Politics

II.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

1. 경제 철학 및 정책 이념

- **(경제 철학)** 오바마 후보는 적정 수준의 정부개입을 원칙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반면에 매케인은 시장경제원칙에 의거하여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함
- **(정책 이념)** 오바마는 적절한 정부개입과 중산층과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 매케인은 기업활동 확충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작은 정부를 지향함
 - 오바마 후보는 고소득 계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 보충, 임금인상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소득 불균형 해소, 그리고 대외 통상 정책의 개선으로 미국산업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우선으로 함
 - 반면에 매케인 후보는 정부지출 자제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우선으로 함

2. 부문별 정책

- **(통상 정책)** 오바마 후보는 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기준에 의한 미국산업과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동 및 환경기준의 강화와 의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무역촉진권한(TPA) 개정을 요구
 - 반면에 매케인 후보는 현 NAFTA 유지와 현재 진행 중인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의 FTA를 즉시 비준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은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준 권한임. 타결된 대외통상협정을 의회가 내용의 수정 없이 찬반 의결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6월 30일 만료되었음.

- **(재정 정책)** 오바마 후보는 경제 침체 시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개편을 통한 고용 창출과 노동조합 참여 자유 확보와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을 강조
 - 반면에 매케인 후보는 부시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면제 확대, 조세감면, 주택보유 확대에 초점을 맞춤

- **(對 한반도 정책)** 오바마 후보는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시장개방 수준에 실망을 나타내며 한미 FTA의 수정을 요구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 오바마는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할 것을 강조
 - 반면에 매케인 후보는 FTA 적극 추진과 비준 문제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원칙에 의거하여 강경 노선을 취함

- **(장·단기 금융정책)** 최근 금융 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양 후보의 단기적 처방은 거의 동일하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장기 과제에서는 차이를 보임
 -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 기능 강화와 양대 모기지 정부 지원 기관의 국유화 방침에는 양 후보가 동의하나, 이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음
 - 오바마 후보는 모기지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국유화 지지
 - 매케인 후보는 시장경제원칙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민영화 추진
 - 오바마 후보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 완화에 주력
 - 가계 부문 연금 인출시 10% 위약금 면제함과 동시에 대량 실업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업 수당 과세 유예 및 기간 연장을 주장
 - 기업 부문의 고용 창출을 위해 정규직 채용시 세금 면제와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를 주장
 - 한편, 매케인 후보는 연금계정 인출 세율과 자본이득세율 인하 주장

< 미국 대선후보 주요 정책 및 우선 순위 >

정책분야		버락 오바마(민주당)	존 매케인(공화당)	
경제이념	경제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 지향 -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정부개입 확대 - 중산층 및 저소득층 육성 통한 경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자유시장경제 원칙 고수 - 기업활동 활성화 통한 경제안정 	
	정책 우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세, 임금인상, 공공서비스 확충 (부의 불균형 해소) - 미국산업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 - 기업, 고소득층 증세(재정적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감세정책(기업활동 활성화) - 미국 근로자들의 국제경쟁력 제고 - 정부지출 자제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부문별정책	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지 정부지원 기관 국유화 찬성 - 연금인출 위약금 면제 - 중소기업 대출 600억달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화 찬성, 차후 민영화 추진 - 연금계정 인출 세율 인하 - 자본이득세율 인하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개편을 통한 고용창출 - 경제 침체 시 국가세입 감면조치 - 노동연합 참여 여부에 대한 자유 보장 - 최저임금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 주택보유 확대 -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통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NAFTA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필요 - TPA¹⁾ 개정을 통한 의회 권한 제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NAFTA 유지 - 현행 FTA 즉각 비준처리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對한 반도 정책	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반대 및 수정요구 - 한국시장 개방 수준에 실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통한 수출 증진 - 한미 FTA 비준문제 해결의사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의 평화적 해결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주의 원칙, 북미관계 악화우려
	에너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일과 가스의 자국 내 생산 확장 - 청정 연료개발, 지구온난화 대책 	
외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에서 다자주의적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틀 속에서 한국과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한미 양자관계 유지 		
경제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 지지 : 워렌 버핏 - 수석 경제참모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대 교수 (증세, 부의 불균형 해소 주창자) - 주요 경제자문역 : 제프리 리브만 하버드대 교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화폐주의자) - 선임보좌관 더글라스 홀츠이킨 전 부시대통령 경제자문위원 (작은정부 신봉자) - 주요 경제자문역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CEO 등 		

주 : 1)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준 권한임. 타결된 대외통상협정을 의회가 내용의 수정없이 찬반 의결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6월 30일 만료되었음.

III. 대선 결과의 영향

1. 오바마 당선시 미국의 예상 정책

- **(現 경제위기)** 현 미국 금융위기의 해결 방안에 대해 미국 FRB나 재무부와 동일한 입장에서 구제금융 지원 등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해 재발 방지와 국제 금융부분의 규제 개혁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의 장기 지속을 막고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환급 등의 재정정책을 비롯한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추진이 예상됨
 - 특히,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과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면제와 직접적인 재정 지원 계획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는 당선자도 참가하여 기존 국제 금융통제기구의 감시·감독 역할의 강화뿐만 아니라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 등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 세제감면을 통한 국내 소비 제고가 예상됨
 - 세제개편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
 - 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감소 및 저소득층 지원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국가 세입 경감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

- **(통상정책)** 전통적인 기조를 따른다면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으로 자국내 경제 안정화 기도
 -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자유무역으로 보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
 - 경기 둔화가 확대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슈퍼 301조'와 같은 정책을 통해 성장 제고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 있음

- **(에너지정책)**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알래스카 해안지역 유전 개발 등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자립 달성과 재생 에너지 개발 등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외교정책)**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16개월내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는 등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감

2.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세계 경기)**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확대 재정정책이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화를 위한 공감대로 인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공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국가별 재정정책 확대가 실현될 전망
- **(통상환경)** 미국 산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 미국 산업 보호 및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미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
- **(국제 금융 여건)** 미국 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이 되는 시점에서 당선자의 금융위기 해결 의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
 - 당선자는 금융위기와 경기 둔화 우려를 진정시키는 한편, 추가적인 구제 조치로 의회와 공조 노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됨
 - 대선 이후 당분간 현재의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약진과 유럽의 견제로 점차 국제 금융 시장 재편을 추구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임
- **(세계 정세)**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미국 국내 경제 정책과 더불어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 정권 초기에는 정책 불안이 다소 표출될 것으로 우려됨
 - 고속의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해 온 신흥 경제국들의 부상이 주목됨
 - 또한 미국내 경제 순환이 오마바 정권 초기에는 정책적 변환 과정속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약 1년 정도의 구조적 조정 과정이후 견실한 경제 구조를 갖출 것으로 예상됨
- **(외교정책)** 평화공존 모드로 인해 갈등 지역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증대
 - 이라크에서는 미국은 16개월내 주둔 병사들을 철군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진전이 예상됨
- 중동지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와 같은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 시도 증가
- **(에너지정책)**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은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미침
- 에너지자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한 원유 수출국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으로 작용
- 미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확대가 예상되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국가들에게는 신에너지 개발과 수요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
-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녹색성장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산업부문에도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제품의 요구 증대가 요구

3. 한국 경제

1) 긍정적인 영향

- **(경제불안 해소)** 미국의 금융 불안 해소 대책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금융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민주당은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민주당의 달러 강세 기조** :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강한 달러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음
- **(對한반도 정책)** 북미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오바마의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이에 따르는 한국 신용 등급의 상승 등 정(+)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북미관계 급속 개선 시 한국의 입지 약화가 우려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 환경 및 재생 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녹색 성장과의 시너지 효과** :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2) 부정적인 영향

- **(한미 통상 관계 악화)**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한미 FT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준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노조에 기반을 둔 오바마 후보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무역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임
 -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 기조를 보이며,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무역 조치도 취해질 수도 있음
- **(대미 수출 둔화)** 체질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 둔화가 전망됨

< 오바마 후보의 정책과 영향 >

정책	내용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에 차질이 예상됨 ·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 기조 · 노조에 기반을 둔 오바마는 자동차에서 특히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행정부의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조치 우려 	(-)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은 달러 강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기업에 유리 	(+)
에너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재생 에너지 부분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녹색 성장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 존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 	(+)
외교 정책 (대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심의 외교를 벗어나 다자간 협력 강화 · 북핵 문제를 다자간의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교 정책 (대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직접외교를 표방하고 있어 북핵 문제 등의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 증대 ·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 기대 	(+)

IV. 대응방안

- **(FTA 비준 조기 추진)** 미국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기 다수당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 이에 따라, 한미FTA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에 대비한 협상 우위권을 선점하는데 주력해야함
- **(수출 증대 노력 강화)** 향후 미국 경기 회복과 달러화 강세를 활용한 수출 증가 노력 배가 필요
 - 대선 이후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 따라 물가안정 등을 통한 경기 회복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미 통상 외교 강화)** 민주당과 오바마 계열의 정책 입안자들과 외교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요구됨
 - 민주당 혹은 오바마의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입안자들과 인적 관계 구축에 대한 노력을 강화
- **(녹색 성장 전략 추진)** 미국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과 부응하는 녹색 성장 정책을 지속적 추진해야할 것임
 - 미국과 기술 개발 및 투자 협력 확대
- **(남북 관계 개선)** 민주당 집권 후 예상되는 대화를 통한 공존 무드로 북미관계 개선에 대비한 선제적 남북 관계 개선 노력 필요
 - 전통적으로 민주당 집권 기간에는 대화를 통한 협상에 따라 평화 공존 분위기가 예상되므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전에 남북 관계의 화해무드 조성이 시급함
 - 북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된 북미관계에 대한 자신감으로 남한 정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남한 정부의 유연한 자세 설정 필요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임 희 정 연구위원 외 (3669-4031, limhj9@hri.co.kr)